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

(김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37
----------	-------

발의년월일 : 2020. 12. 2.

발 의 자 : 김진숙 의원 등 21명

1. 제안이유

- 일본 정부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을 준비 중임.
-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될 경우 우리나라 연안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오염이 예견되는 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함.

2. 주요내용

-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전면 철회 촉구
-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 정보 공개 및 처리방안 국제 협의 촉구
-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촉구

3. 송부대상 :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 결의문(안) “별 첨”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일어난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덮쳐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폭발한 제1원전에서는 일일 평균 160~17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녹아내린 핵 연료봉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수십 년 간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한 후쿠시마 원전 탱크가 한계에 달하여, 저장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하여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국내·외의 반발 여론에 부딪혀 지난 10월 27일 예정되어있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11월 이후로 미뤘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방사능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처리를 한 후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과정을 거쳐도 방사성 물질 중 하나인 삼중수소(트리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다.

해양은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이다. 해양 오염은 국경 없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특히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지금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사능 오염수로 수산물이 오염되고,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신체에 방사성 물질이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오염수 처리 방법은 더욱 철저한 국제사회의 협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철회하고, 국제사회 및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하여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우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2. 18.

안 산 시 의 회